



특허청

보 도 자 료



보도 일시	2022. 4. 4.(월) 09:00	배포 일시	2022. 04. 04.(월) 08:30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 한덕원 (042-481-5182)
		담당자	사무관 장성국 (042-481-5999) 주무관 변지현 (042-481-527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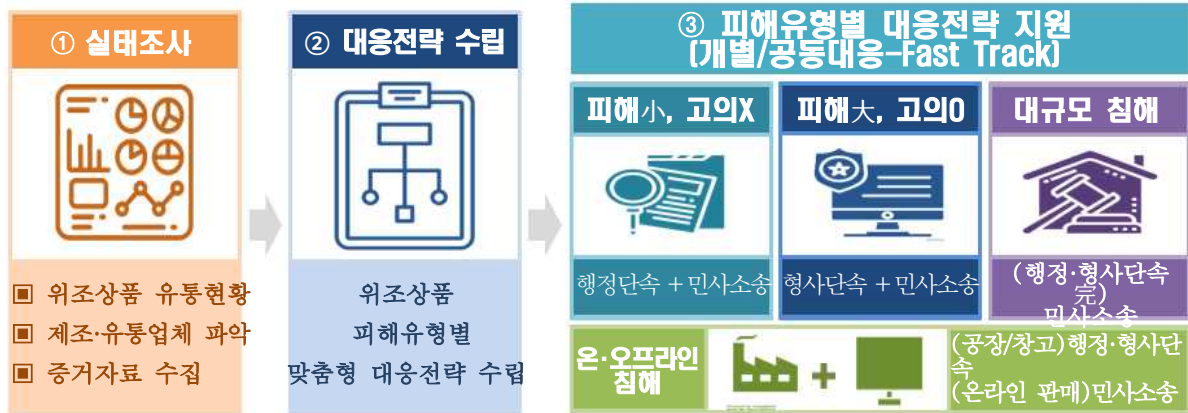
특허청, 민관공동으로 위조상품 유통차단에 나선다!

- ‘해외 위조상품 제로(Zero) 민관협력 프로그램’ 신규 추진 -
- 위조상품 실태조사, 행정·형사단속, 민·형사 소송 등 연계 지원 -

- #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케이-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이 증가하면서, 우리기업의 매출 축소, 일자리 손실,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.
- # 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실태조사, 행정·형사 단속, 민·형사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, 피해기업들이 개별적인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.

-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해외에서의 케이(K)-브랜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「해외 위조상품 제로(Zero) 민관협력 프로그램」에 참여할 업종별 협단체를 4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.
-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기업들에 대한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최대 5년 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. 이를 통해 피해기업들은 국가별로 자사의 온·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 및 제조·유통업체 등을 파악하고,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.
- 또한, 위조상품 피해기업들은 이러한 위조상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적시에 제공받아 행정·형사 단속 뿐만 아니라, 민·형사 소송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< 해외 위조상품 제로 민관협력 프로그램(안) >



-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케이(K)-브랜드 위조상품은 국내기업의 매출액 감소, 국내 제조업 일자리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, 우리 기업들의 위조상품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- 한편, 「해외 위조상품 제로(Zero) 민관협력 프로그램」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은 특허청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가 가능하며,
- 4월 4일(월)부터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(www.koipa.re.kr)를 통해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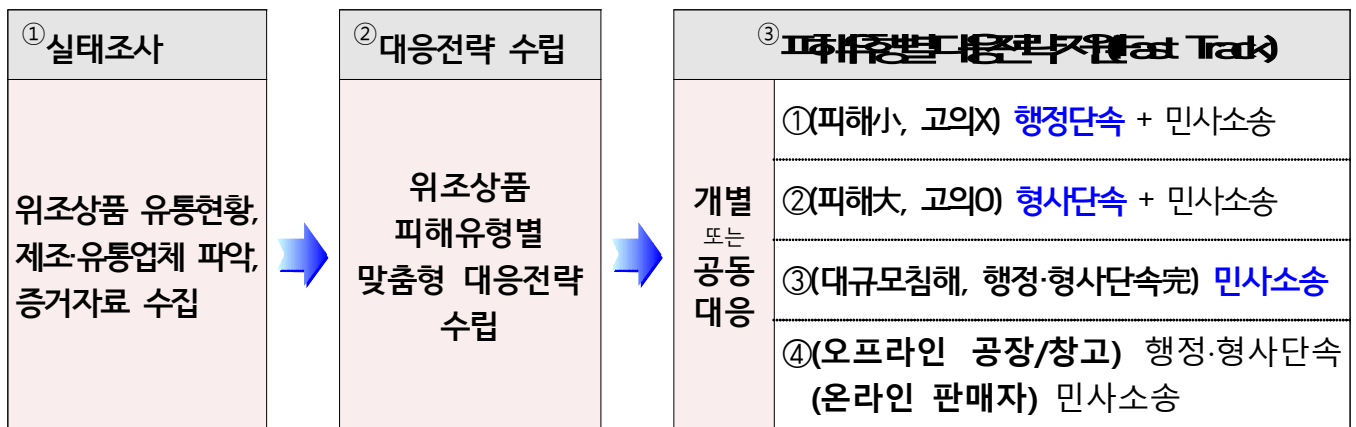
「해외 위조상품 제로 민관협력 프로그램」 개요

□ (목적)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유통차단 등 K-브랜드 보호를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

□ (내용) ①실태조사(최대 5년간 매년 실시) → ②위조상품 대응전략 수립
→ ③Fast Track*으로 개별 또는 공동 대응전략 지원

* 신청서류·절차 간소화 및 선정심사 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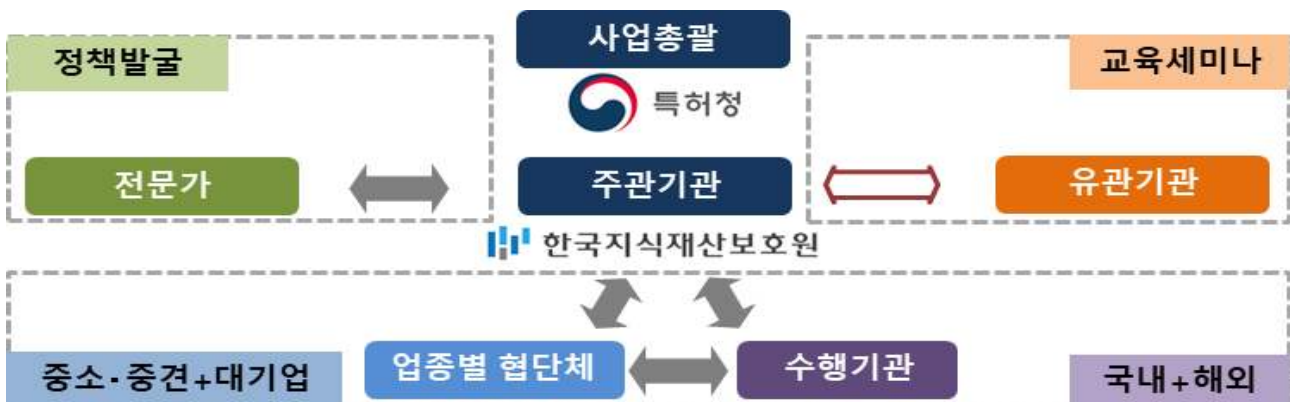
< 해외 위조상품 제로 민관협력 프로그램(안) >



□ 추진 체계

○ 지식재산보호원-협의체(협단체)-수행기관 간 3자 협약

< 프로그램 추진체계(안) >



□ 소요예산 : 업종별 연간 약 2억원 투입(정부 70%+기업 현물 30% 매칭)